

제7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사회통일교육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 일시 : 2002. 12. 13(금), 14:00 ~ 18:30
- 장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통일교육연구원

통 일 부

## 목 차

I. 진행순서 .....	5
II. 제1주제 발표문 .....	7
사회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II. 제2주제 발표문 .....	35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IV. 부 록 .....	69
1. 통일교육지원법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 진행순서

- 13:30-14:00 등 록
- 14:00-14:30 개회식
- 개회사 (정석홍 통일교육연구원장)
  - 축 사 (정세현 통일부장관)
  - 격려사 (손재식 통일동우회장)
- 14:30-15:00 제1주제 발표
- 이우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5:00-15:30 제2주제 발표
-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 15:30-15:40 커피 브레이크
- 15:40-16:10 제1주제 토론
- 조영규(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정용술(전 교육인적자원부 장학편수실장)
  - 박영호(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 16:10-16:40 제2주제 토론
- 신영석(평화문제연구소장)
  - 김경태(민주평통 상임위원)
  - 윤경태(전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 16:40-17:00 종합토론(방청토론) 및 폐회
- 17:20-18:30 통일대화의 광장 (만찬)

◆ 사회 : 정석홍 (통일교육연구원장)

**제1주제 발표문**

**사회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 우 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문제제기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국가간의 경계는 흐려지고 시장만이 존재한다는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다각적인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만 남북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면서 남북한 체제 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가 크며 민족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21세기에 한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은 무관심과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통일교육은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기초하여 사회 통일교육의 출발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적인 대안의 추구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방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Ⅱ. 사회통일교육의 개념과 실태

### 1. 사회통일교육의 개념

사회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통일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고,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서는 사회통일교육지침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통일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그 속성상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회인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통일교육은 남북간 화해·협력 시대의 주역인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써 이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통일환경은 그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달리 일반 사회인은 남북관계와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사회통일교육은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체제 차원의 통합과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의 통합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일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지침에 따르면 사회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사실상의 통일 지향
- 2) 적극적 '평화 만들기'와 포괄적 안보관의 수용
- 3) 사회문화 영역의 중시
- 4)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내용 구성

또한 통일교육원에서 제안한 사회통일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사실에 기초한 북한 이해

- 2) 쟁점과 사례 중심의 접근
- 3) 교육환경과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
- 4) 교육 종료 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관심 촉구
- 5)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

## 2. 사회통일교육실태

통일교육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회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사회통일교육은 다음의 몇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구체적인 과정과 교육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통일교육 전문위원 (연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시각 형성 및 대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li> <li>○ 대국민 통일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기법 습득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 강화</li> </ul>
통일교육 전문위원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시각 형성 및 대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li> <li>○ 대국민 통일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 및 기법 습득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 강화</li> </ul>
민주평통 자문위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관련 교육홍보 활동에 필요한 내용 및 기법 습득</li> </ul>



향군 안보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통일문제 및 남북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통일안보교육 강사로서 필요한 교수능력 함양</li> </ul>
민방위 소양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통일문제 및 남북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민방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지도요령 및 교수능력 함양</li> </ul>
정훈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 세대 장병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및 안보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li> </ul>
통일단체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통일문제 및 남북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남북화해협력 과정에서 민간통일단체의 역할과 방향 모색</li> </ul>
종교단체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통일문제 및 남북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남북화해협력에 있어 종교인의 역할 및 바람직한 종교교류 방향 모색</li> </ul>
여성단체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통일문제 및 남북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li> <li>○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 및 남북여성교류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li> </ul>

### 3. 통일교육협의회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보조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 통일교육협의회이다. 통일교육협의회의 활동 분야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홍보사업 : 홈페이지 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보를 발간·배포를 통해 통일교육 협의회의 홍보 우수교육사례 전파
- 2) 통일교육교사 직무연수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개최함으로써, 민간통일교육 연수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현직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높여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
- 3) 통일단체 지도자 교육 :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맞는 통일교육 지도자 양성. 회원단체의 지도자 및 실무자의 통일교육 강사 기능 강화. 강사POOL제를 통해, 늘어나는 국민통일교육 수요에 대비
- 4) 통일교육 학술 토론회 : 통일교육의 현황과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으면 통일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교육 학술회의 개최
- 5) 전체수련회 : 회원들에 대한 통일교육 및 회원간 유대 강화. 통일교육협의회 발전방향 모색

- 6) 회원단체 통일교육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 통일교육의 제반 방법에 대한 연구, 개발. 회원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회원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7) 통일교육 다원화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현재 민간 단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가치교육과 통일교육의 결합 가능성을 연구 분석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 및 법제도적 장치 개선점 모색
- 8) 차세대 통일교육 강사양성 : 남북화해 협력시대에 맞는 통일교육 예비 전문강사양성. 강사POOL제를 통해 늘어나는 국민통일교육 수요에 대비하며 향후 통일교육연구원의 연구부, 교수부 요원으로 지명하여 각종 강의 및 연구 개발에 참여
- 9) 통일관련 언론인 초청 토론회 : 사회적 여론 전과 역할을 하는 언론인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필요성을 부각하고 이슈화

통일교육협의회에는 참여 단체들이 있는데 여성분과위원회의 경우 여성과 평화의 관점이 반영된 통일교육의 실시를 통해 여성 통일교육전문가의 육성 및 예비 여성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통일학교의 운영이 사업의 예가 된다. 청소년 분과위원회의 경우 청소년 통일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분과위원회는 지역별 순회 통일기행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분과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시민강좌를 개최하여 대국민 통일 의식 제고에 목적을 두고서 시민상대의 강좌를 운영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 **4. 민족화해아카데미(경실련통일협회)**

경실련 통일협회는 민족아카데미의 이름으로 꾸준히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NGO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통일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1) 국민들의 혼재되어 있는 대북의식과 냉전적인 대결의식의 교육을 통한 교정.
- 2)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는 이성적인 북한관의 정립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 3) 한반도 평화정착, 민족 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 모색의 기회 제공.

민족화해아카데미는 1996년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700여명의 수강생 배출과 우리 사회에서의 민간통일교육의 전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화해아카데미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민족의 진로와 남북관계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남북문제와 인권  
친일파 청산과 남북의 사관  
북한의 정치구조와 지도사상의 이해  
남북화해시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의 사회문화 이해와 탈북자 문제  
북한의 식량난과 민간교류협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정책의 전망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방안  
평화기행 - 도라산역에서 판문점까지  
북한의 변화와 법제동향  
2002년 한국정치와 남북문제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의 방향  
민족화해 향한 시민사회 역할

## 5. 통일교육문화원의 경우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또 다른 기관으로 통일교육문화원을 들 수 있다. 통일교육문화원은 “남북나눔의 홍정길 회장(남서울은혜교회, 밀알학교 교목)의 도움으로 통일교육과 대북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은 대북지원과는 달리 북한을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국내 통일교육의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바라보면서 문화적, 선교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특히 찾아가는 통일교육(2000년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꾸준히 각 일선학교에 통일교육을 실행한 경험을 살리고 이것을 온라인 통일교육으로 구현하여 폭넓은 시민사회와의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라는 사업목적에 갖고 있다.

통일교육문화원의 제시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1) 신문을 통한 생활 속의 통일습관 만들기 : 참여자 스스로가 교육의 과정 속에서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리고 만들어진 생활 속의 통일습관 아이디어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통일을 준비해가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언어차이를 통한 남북한 문화 이해하기(탈북자와 동행 수업) : 남북한의 언어차이를 통하여 그것을 가지는 삶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연습이다. 이 교육을 받은 후 지금 남한에 살고있는 탈북자(자유이주민)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의 그 날 북한주민들에 대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3) 마인드 맵을 이용한 통일교육 : 그동안 막연히 생각해 왔던 통일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4) 통일신문 만들기 : 통일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참가자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
- 5) 나의 통일유형은 : 일종의 심리테스트로서 보통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 환기의 한 일환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 6) 통일 OX퀴즈 : 퀴즈라는 놀이방법을 통해 어렵고 진

부한 통일교육에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북한에 관한 상식을 높일 수 있다.

7) 통일 윷놀이: 한반도 지도를 말판으로 하는 윷놀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하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평화통일의 염원을 키워나간다. 또한 북한의 지리를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8) 통일염원 도전 12곡 : 즐겁고 재미있는 노래 부르기 게임을 통해 평화통일의 염원을 키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9) 남남북녀 만나기

10) 통일줄넘기

11) 통일축구

## **6. 교원연수원 및 공무원교육원**

교원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의 연수계획에는 주요 정부시책 과제 연수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두 번째로, 후자의 경우는 세 번째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통일교육」(통일부)이 제시되고 있다. 이외 정부 부처에서 권장하는 과목이 제시되고 있다.

교원연수원의 경우 강원도 교원연수원이 통일 관련 과목을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탐라교육원과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의 연수과정에는 통일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17개 연수원 중 2개 연수원 미설치)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서울, 강원, 대전,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 통일관련 교과목을 설치하고 있고, 인천, 광주, 대전, 충남, 경기, 전남, 제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통일 관련 교육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16개 기관중 7개 기관 미설치)

교원연수원의 경우 연수내용은 「통일/대비교육」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와 「남북한 통일정책」이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교과목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국제정세와 통일안보」, 「교류협력시대의 우리의 자세」, 「최근 북한동향과 우리의 자세」 등으로 설치하여 다루고 있다.

두 기관의 연수방법은 대부분 강의식이며, 이외에 시청각이나 토론 내지 참여식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연수원의 경우 재택수업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곳도 2개 정도 있다. 대부분 시간배당은 2시간 정도가 압도적이다.

두 교육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통일 관련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의 기본방향이나 목표가 부재한 상태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과목설치가 통일을 염두하여 유목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과목설치와 관련하여 내용의 측면에서도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삶과 관련되는 삶의 통합의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체제나 이념, 통일정책 내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체제통합의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교재는 대부분 없는 실정이다.



넷째, 대부분의 연수원의 경우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연수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제목 하에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연수방법은 대부분 교수요원 중심의 강의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자의 요구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는 교수요원의 일방적 내용 주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간 배당도 대부분 1-2시간 정도이므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일관련 연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시청각 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된다 해도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7. 해외동포 통일 관련 교육

해외동포 교육기관의 초청교육은 대부분 직접적인 통일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해외동포에게 모국의 현실을 보여 주려는 차원의 교육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방향이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통일 관련 교육의 내용 또한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를 띠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한국을 방문한 동포들이 한국의 현실을 탐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시설을 견학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동포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의식을 심어주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는 다르게 통일 관련 교육 담당자

들은 기관의 교육 목적이나 여건 자체를 비추어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땅굴이나 통일전망대 등을 견학하는 형태의 통일 관련 교육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육 담당자들은 수강자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견학형태의 통일 관련 교육의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협조요청을 위한 서류접수나 심사 그리고 허가의 과정이 복잡하며, 이러한 절차의 부서 담당자들의 협조자세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 **8. 산업교육연수기관**

산업교육연수기관은 1998년 12월 현재 769개이며, 공공 산업교육연수원, 금융계연수원, 일반기업체연수원, 리조트형 연수시설로 구분된다.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과 한국 금융연수원의 경우를 보면, 직무위주의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관련 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일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반기업체연수원이나 리조트형 연수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산업교육 연수기관에서 직무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교육 연수기관에서는 통일 이후의 산업 환경변화를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9. 기타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1997년 현재 정치, 사회, 교육·문화, 종교, 학술, 경제, 국제, 기타 분야에 7,087개가 있다. 대표적으로 통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남북나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중앙대 민족통합교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아태평화재단, 자유총연맹 등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강좌를 보면 난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중 첫 번째가 내용에서 대상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교육 운영의 장소문제이다. 대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강당을 이용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강좌진행이 어렵다. 셋째, 통일교육의 특성상 북한사회에 대한 소개나 과거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영상자료가 많이 요구되나 연구단체나 방송사, 정부기관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넷째, 시민사회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의식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표준적인 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2~3개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명인사 초청을 통해 통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단체의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다.

## 10. 청소년단체

청소년단체는 1998년 12월 현재 108개이다. 이 중 38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해 있다.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호국수련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호국수련활동은 사관학교 및 부대 명예입소 훈련, 땅굴 및 부대 견학, 하계 수련, 해상순례·해양훈련, 통일대행진, 호국활동, 기타 휴양소 시설 이용 등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홍사단 등이 있다.

청소년단체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청소년단체가 갖는 문제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첫째,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한 단속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성 통일교육, 둘째, 통일교육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과 시설 부족, 셋째, 통일교육을 위한 주무부서의 혼재, 넷째, 실제적인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자료 부족, 다섯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Ⅲ. 사회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이상의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실태를 통해서 볼 때, 국민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첫째, 균형성의 추구이다.**

기존의 사회교육기관의 통일 관련 교육의 실태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체계통합 측면에의 중점, 정치적 내지 제도적 측면에 치우침으로서 나타나는 교육의 추상적 측면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으로써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조화, 추상성과 현실성의 조화, 정치적 영역에 대한 교육과 비정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둘째, 적합성의 추구이다.**

이를 위해 정부시책 과목에 따라 획일적으로 과목을 설치하거나 내용을 구성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있어 시간 배당 문제, 그리고 교육 공간 확보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 **셋째, 다양성의 추구이다.**

기존의 특화되지 못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강자들의 흥미나 재미 또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직업별, 세대별 및 성별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사회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بان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 및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전문성의 추구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주로 수강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등 직장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수기관의 연구과정에서 연수종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론적 측면과 각론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에 상응하는 교육목표 및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로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요소를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관련 교육 현장 연수 사례와 앞에서 말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교육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의 특성을 갖는 논문집 성격의 자료집이 필요하다.**

예컨대 「통일교육논총」과 같은 논문집을 발간함으로써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담당자나 교수요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자료집은 기존의 이론적 성향을 다분히 띠는 학술적 논문집과는 차별화된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객관적 접근과 열린 교육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설정된 목표 하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론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주입식 학습이나 완성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율적 사고에 의한 의사형성을 주목

적으로 하는 민주적인 열린 교육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교육기관의 통일 관련 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기본 방향 내지 목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본방향 내지 목표는 수강자들이 성인이라는 점, 정규적 교육과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학교통일교육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 IV. 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연계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조정 및 협조를 이루며, 정책개발 및 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사회교육기관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강자와 교육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태의 분석을 통해 관련되는 지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아울러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나 청소년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점사업을 삼는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통일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기관은 정책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재와 교육기법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언론매체는 교육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종합적 지원센터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교육의 방향·목표·내용을 정립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모를 하며, 교재개발 및 지원, 교육기관의 조정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협조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해야 한다.

## **2. 다양한 자료개발을 통한 다종의 방법 적용**

### **1)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각종 시사자료 개발**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간행된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이해」는 원론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초·중등학생용, 대학생용, 성인용 등으로 대상에 맞게 다양한 자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사성 홍보자료를 교육용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 홍보자료는 만화나 소설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



## 2)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일교육 방법의 적용

강의식을 일부 혼용하는 형태를 취하되 여기에 교수요원과 학습자간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찾기 수업, 찬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립토의(debate) 등을 가미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이 되게 한다. 또한 학습주제를 학습자가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향이 다른 신문들의 내용을 기초자료로서 교육에 활용하거나, 기존의 다른 견해를 표방하는 정기간행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최근 시도하고 있는 통일관련 언론 모니터링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조를 수록·분석(일간지별 사설, 해설기사 요약 등)하고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3)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는 시청각 자료 개발

시청각 자료는 교육단계별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청각자료는 '남남북녀의 결혼', 남북한의 소비생활 '(주부대상), '북한의 농업과 농촌현실'(농협중앙회 연수용), '북한어린이와 청소년의 생활', '북한의 대입제도'(학생 대상의 교육), '북한의 교육현실'(교원연수원), '북한의 은행경영'(금융연수원) 등의 차별화된 시청각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의 통일관련 과목 시간 배당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1~2시간 배당은 20분 내외, 3시간 이상은 40~50분 내외)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 **4) 종합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다종의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은 우선 이용대상자의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 및 제공하며, 정부부처나 유관기관의 네트워크와 연계를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북한실상이나 주민생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요소를 개발하고, 남북한의 언어이해를 돕기 위한 퍼즐게임과 같은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5) 체험학습 방법의 도입**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서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학습의 차원에서 통일전망대, 임진각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나 민간사회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내용을 모의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이나 역할극이 수강자들의 관심도나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바람직하다. 이것은 특히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평화통

일극'(남북나눔운동), '북한가정의 가계부쓰기'(중앙대 민족 통합교실), '탈북자 가정의 경제생활 체험하기'(중앙대 민족 통합교실) 등이 있는바, 이를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환경에 맞게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교원연수원의 교육담당자(교학과 연구사나 장학사 등)에 대해 통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일관련 과목 설치와 시행에 원활하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담당자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일교육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통일관련 교육시 민간 및 공공 사회교육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교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강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담당자 대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점은행제에 따라 연수학점을 부여한다.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에게는 가칭 '통일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수여함으로써 통일교육 전담요원을 양성한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전문요원으로 활용한다.

## **3.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 **1) 기존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발간**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중이거나 개발된 통일관련 교육

프로그램, 통일부나 교육부로부터 과제로 부여받아 제출된 교육프로그램 등을 총 집대성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보급한다. 이때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2)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

통일교육원의 주도 하에 각종 사회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 선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모시 세대별, 성별, 교육기관별, 전문직별, 시간별 구분 하에 일선 교육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프로그램 뱅크의 운영**

개발된 통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뱅크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부나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프로그램 뱅크에는 통일교육 전문가, 북한문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목록작성이 아니라 지역별 목록의 교차배치를 통해 지방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4.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간 및 예산 확보**

##### **1) 공간 확보 및 활용 협조**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위한 공간은 지역사회  
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문화시설(시·군·구민회관, 복지회  
관, 문화원,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 사회교육기  
관들이 통일교육지원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장견학이나 유적지 견학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민간사  
회단체나 해외동포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일부 차원에서 현장견학을 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  
기관의 견학계획을 년 초에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  
를 일괄적으로 조치해주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 **2) 예산확보**

무엇보다도 우선 각급 교육기관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언  
론매체의 통일관련 전문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필요한 예  
산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학교 교사 및 연수기관 교육담당  
자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비용 확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이버통일교육 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학  
의 북한학과, 통일문제연구소, 통일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한 예산의 조정 또는 확보, 통일교육협의회의 사업지원 행사 및 활동지원 예산, 민간교육기관과 언론매체의 통일교육 관련 행사 및 활동지원 예산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등 기존 관련 기관, 연구기관, 각종 사회교육기관, 언론매체 등 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 등을 홍보하고,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정부 관련 부처들에 대해 요구하며, 이를 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현재 아주 작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주제 발표문**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

김 재 흥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sup>1)</sup>

## 1. 문제 제기 : 남북화해와 남남화합의 역비례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해 가는 것과 거의 역비례로 남한의 국내정치와 사회계층간의 남남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 정당간의 국정동반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분야가 바로 통일안보 정책이고 남북관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그 후속이행으로서 남북 장관급회담 같은 민족적 차원의 문제를 두고 오히려 국론이 분산되고 여야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남남갈등은 지난 6월 서해교전 사태와 10월 북한 핵 의혹이 불거진 후 더욱 증폭됐다.

---

1)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박사. 미 하버드대 니만펠로십 수료.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논설위원. 관훈클럽 운영위원.  
현재: 경기대 교수. 한국정치학회 이사. 국가안보회의 정책전문위원. 국정홍보처 정책평가위원. 한겨레신문 정치칼럼니스트. YTN 집중조명 앵커.



보수적 지식인들은, 첫째 대북정책의 기본철학과 관련해 서 인권탄압 시비를 받고 있는 북한정권과의 평화협상에 대해 반대한다. 북한의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외면하면서 그 정권과 손잡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북한의 인권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상호주의에 의해 호응해오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구나 국내에도 영세민과 극빈층이 많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은 부족한데도 정부예산까지 투입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셋째 6.15남북공동선언 후에도 남한의 보수층에서는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알 길이 없는데도 남북협상이 너무 성급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므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에서 국민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독선적 결정으로 밀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넷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25전쟁과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에 사과하지 않은 채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현안문제로 최근 북한 핵의혹이 대두된 이후 대북 압박론이다.

이런 쟁점들이 지식인 사회에서 먼저 토의되고 수렴되지 않는다면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여론주도와 국민 교육을 위한 언론과 지식인의 역할은 불가능하다. 거꾸로 국민 인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남북화해 추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족공동체의 형성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분단체제 지식인의 시대적 소명이다.

## 2. 존재구속성을 초월한 無黨派性的 지식인

### 1) 지식인의 정치사회학적 범주와 특성

지식인의 범주는 후진사회일수록 광범해서 근대적 고등 교육을 받은 층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에 대학생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그 범위는 줄어들어 자유직업을 갖고 기존의 사회제도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지식인으로 지칭된다.

오늘날 일반적인 자유지식인 개념에는 학자, 언론인, 작가, 의약사, 예술가, 교사, 종교인 등이 꼽힌다. 이런 범위 규정은 후진사회일수록 구성원의 내부적 역할분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근대화가 진전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계층 및 직업분화가 다양해져서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때 자유지식인의 자격은 직업보다도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기준으로 된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지식층은 중세봉건 시대까지 주로 지배계급의 비호아래 知的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정치권력과 사회 기존질서 유지에 봉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역사 속에서도 지식층 일부는 지성과 양심에 따라 자신이 봉사하는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검토 평가해서 적극적으로는 비판 견제하고 소극적으로는 도피하기도 했다.

정치권력과 사회 기존질서에 대해서 지식인의 비판역할이 본격화되는 것은 유럽에서 17,8세기 계몽주의와 시민혁명기에서였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크레인 브린턴은 혁명발발의 가장 결정적인 징후로서 지식인의 離叛현상을 든 바 있다.<sup>2)</sup> 기존질서에 대한 지식인의 이반현상은 봉건사회에서 시민대중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화과정에서 처음 나타났다. 당시 지식인들의 행동기준은 민중에 두어졌다.

정치사적으로 지식인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은 그 후 지식인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의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은 경제적 욕구와 정치적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되자 지식인들조차 현실개혁 의지를 상실하고 만다고 개탄하는 저술들을 다수 내놓았다.<sup>3)</sup>

세이무어 립세트는 “민주주의적 사회개혁의 승리가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나 유토피아적 이상을 간직한 채 정치행동에 나서야 하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종식시키게 한다”<sup>4)</sup>고 썼다.

배링턴 무어는 “우리가 경제적 부당대우 및 특권을 감소 시킴에 따라서 정치적 의견 제시를 형성시킬 차별감과 불만 의식(discontent)이라는 動因까지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지 모른다. ... 일정 목표가 일단 성취되거나 또는 실현에

---

2) Crane Brinton, *The Anatomy of Revolution*(New York: Random House, 1965), pp.39~49.

3) 金在洪, *이데올로기와 反이데올로기*(서울: 극동출판사, 1982), pp.29~37 참조.

4) Lipset, *op.cit.*, pp.442~3.

가까워지기만 해도 불만이라는 정치행동의 동인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회는 한 동안 얼빠지게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정착기에 접어 든다”고<sup>5)</sup> 개탄했다.

또 데이비드 리이스맨은 “경제적 부의 전체적인 신장과 그에 따른 심한 불평등이 해소돼서 정치적 다양성의 배경인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존속되기가 어렵다. 그로 인해서 아직도 억눌려 있는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등장되기가 어려운 것이다”<sup>6)</sup>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들 정치사회학자들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만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아무리 경제 성장과 정치발전을 이룩해도 불만감과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불평등과 모순이 존재하는지의 사실 여부보다도 그것을 느끼는 불만감이 중요하며 그것을 제시하는 역할은 지식인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상대적인 빈곤해소와 당면한 정치적 요구의 해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시적 만족에 도취되어 현실불만이나 모순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보다 나은 이상사회의 건설을 위한 추진력이 무산되고 만다는 경고인 것이다.

이들 정치사회학자들의 관점은 끊임없는 불만감이 사회

---

5) Barrington Moore, Jr.,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p.183.

6) David Riesman, “Introduction,” in Stimson Bullitt, *To be a Politician*(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59), p.20.

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으로 일종의 영구혁명론에 해당한다.7) 그리고 그런 불만감을 사회발전의 추진력으로 동력화하는 일이 바로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끊임없는 비판의식과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상주의가 지식인의 특성이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 2) 시대정신의 주창자로서의 지식인

정치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지식인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하나는 그 사회내 지식인 공동체의 전통이다. 지식인 공동체란 자신들이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과 의사표현에서 자주 사용하는 심볼과 준거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8) 이 지식인 공동체가 그 사회의 고급문화인 知的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보존하면서 전통적 가치들을 후배 세대에게 전승해주는 역할을 한

---

7) 영구혁명론은 1850년 독일의 공산주의자동맹이 처음 쓴 용어지만 1905년 이후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트로츠키가 취한 견해였다. 러시아에서 혁명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에 무산계급 혁명을 유발시켜서 그 지원을 받아가며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트로츠키이즘의 중심개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서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의 공산주의 혁명론이 아닌 일반적인 뜻으로 계속적인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8) 지식인 개념과 역할에 대한 권위있는 연구자로는 미국의 뛰어난 정치사회학자인 에드워드 쉘즈를 들 수 있다. 쉘즈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

Edward Shils, "Intellectual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7(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4), pp.399~414.

다. 그런 지식인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제란 연속적인 정치사회화, 즉 교육과 문화전수의 역할이다.

지식인의 과제를 정해주는 두 번째 요소는 정치사회적 시대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지식인들을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서구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과제로부터 새로운 시대상황으로 전환을 주창한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예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명제였다. 195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서구사회의 지도적 학자들이 모여 ‘자유의 장래’(The Future of Freedom)라는 주제아래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 립세트와 쉴즈를 비롯해 시드니 후크, 다니엘 벨,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영국에서 콜린 클라크와 휴 게이츠켈, 프랑스의 레몽 아롱 등 좌우파의 인문사회과학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학술대회는 당대의 시대사조를 결산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밀라노 학술대회에 참가한 지식인들의 영향력은 저술활동을 통해서 널리 확산됐다. 1950년대 후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이 일종의 시대어로 유행처럼 번진 것은 이 학술대회에 참가한 지식인들에 의해서였다. 55년 1월 출간된 레몽 아롱의 저서 ‘지식인의 아편’(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은 “이데올로기는 종언될 것인가?”를 결론으로 삼았다.

이 학술회의 내용을 정리한 쉴즈의 논문 제목도 “이데올로기는 종언되는가?”였다. 역시 이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다니엘 벨은 이 문제를 광범하게 논술한 저서를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이름으로 냈다. 주로 미국사회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립세트의 주저 '정치적 인간'도 "이데올로기는 끝나는가?"를 걸어로 삼았다.

17,8세기 계몽사상가의 등장 이후 근대정치사가 이데올로기의 작동과 분화에 의해 전개돼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 하나의 새로운 시대사조가 지식인들에 의해 던져졌음을 의미했다. 지식인집단이 스스로 정립해 놓은 이데올로기의 현실타파라는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을 깨고 새로운 시대사조를 처방한 것이다. 그 처방의 내용에 대해 쉴즈는 다음과 같이 썼다.

“거의 모든 토론 참가자들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독단주의와 광신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구속성 등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거의 모든 토론 참가자들은 인류가 만약 그의 삶의 바탕을 개척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면 강요된 교조와 환상과 그리고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의 쇠사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9)</sup>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종언된 자리에 당시 지식인들이 대체한 새로운 시대정신은 고도 산업사회의 테크놀로지였다.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21세기 한국에서도 남북화해 및 평화와 남남통합의 대세

---

9) Edward Shils, “The End of Ideology?” Encounter, vol.3(1955,11), p.53.

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확립하는데 그와 같은 지식인들의 일대 역량집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것이 남남갈등의 고질적 요인을 치유하고 남북화해의 에너지를 모으는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 3) 존재구속성의 극복

지식인의 역할에 관해 중요한 저술을 남긴 칼 만하임은 “모든 지성적인 입장이 실제로는 그 배후의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에 기능적으로 의존한다”고 기술해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sup>10)</sup> 이것이 지식인의 존재구속성(Seinverbundenheit) 개념이다. 지식이 그것을 생산하는 주체의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회환경의 제조조건들에 둘러싸여서 그것에 구속돼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지식인이 생산하는 사상이란 그가 처한 사회환경과 주관적 입장에 종속적이며 지식인의 역할도 자율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마르크스에 있어 모든 사상은 환경, 제도, 역사의 산물일 뿐이었고 이데올로기란 단순히 사회변화의 종속변수적 허위에 불과했다. 마르크스는 사상과 역사발전 사이의 상호관계를 부인하고 과학이라는 객관적 진리까지도 한 시대의

---

10) 만하임은 인간의 모든 의식이 사회환경에 의해 지배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이어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Karl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p.190.



지적 수평선을 넘어 보편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란 의미가 없었으며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식으로 한정시켜서 생각했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구체적으로 지식과 사상이 계급소속성 또는 당파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가 지식인의 계급성을 주장했다면 만하임은 그보다는 광범한 사회존재론적 연관성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면 계급이라는 一義的 개념보다는 직업과 종교, 그리고 제반 사회과정이 지식인의 의식을 구속한다고 본 점에서 마르크스와는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사상과 의식의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하임이 제시한 것이 현실적 존재구속성을 초월하는 지식체계로서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개념이었다.

만하임은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형성되는 지식인 집단을 하나의 계층으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썼다. 지식인을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간주하기에는 구성요인이 너무도 다양하지만 지식인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기준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공통적인 교육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출생,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등에서 연유하는 차이를 중화시키고 교육받은 개인들을 그들이 교육받은 기준에 따라 통합시킨다고 지적했다.<sup>11)</sup>

한국의 지식인들이 정책비판이나 대안제시를 할 때 스스

---

11) Karl Mannheim, *Ideology and Utopia*(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p.139.

로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존재구속성일 것이다. 자신의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지역주의와 학연주의를 비롯, 여러 가지 인연들에 얽힌 사회적 존재로서 객관적 역할이 상실돼 가는 현실이다. 그런 현실적 제약요인들을 초월해서 사회공동체와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 4) 한국 지식인의 위상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은 일제 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해방 후엔 1960년 4·19 반독재의거를 비롯해서 1987년 6·10시민항쟁에 이르기까지 대중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적지않은 지도적 지식인들이 일제에 협력했고 또 해방 후엔 어용지식인들이 독재정권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4·19이후 지금까지 지식인들은 정치권력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많은 지식인이 정치권에 진출했다.

전문적 식자층과 거리가 먼 정치인들이 판을 치던 시대는 4·19와 함께 끝났으며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체계는 고도의 전문지식인들이 참여한 테크노크라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유신체제 아래서 군사권위정권이 임명한 각료들이나 유정회 국회의원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교수와 언론인, 법조인 출신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지식인층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정리해 보면 독재정권에 핵심 브레인으로 들어가 협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양분구조였다. 이처럼 많은 전문지식인들이 정치기술을 빌려주었기에 군사권위주의 통치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 체제를 비롯한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신망받는 지식인들을 영입한 이유는 자신들의 약점인 정통성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지식인이 군사정권과 함께 당시의 정치사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무시할 수 없는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군정체제에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의식과 도덕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정권내부에서 맡은 역할은 결정권 없는 기능적 피고용인에 불과했다는 변호도 있다. 과거 한국의 지식인 문제는 참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과정에서의 역할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의 핵심문제일수록 결정은 군 출신 실세들에 의해 막후에서 이루어졌고 지식인 피고용자들은 소외됐다.

이에 대해 외국의 한국학자들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한국학연구소장 카터 에커트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군정 체제에 참여한 한국의 대학교수와 언론인들은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 아닌가. 참여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체제의 독재정치와 인권탄압, 언론통제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고 질문했다.<sup>12)</sup>

---

12) 1996년 3월7일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계기로 본 한국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

당시 군정에 참여한 지식인들로서는 책임론을 피할 도리가 없다. 또 집단적 개념으로서의 한국 지식인층도 공동책임이 있다. 그러나 군정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정치사회학적 계층으로서 가져야 할 특성인 양식과 도덕성, 역사의식 같은 것보다는 군인 집권자들과의 동향의식과 출세주의 등에 더 지배됐다는 점에서 지식인 계층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

32년에 걸친 군사권위주의체제가 남긴 유산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분열적인 문화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가공동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통합과 협력의 토양을 말살했으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민의 역사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식인의 화합적 역할이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갖는다.

### 3. 남남갈등의 양상과 초월적 지식인

#### 1) 사회경제적 지역주의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중에서 화합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병폐가 지역주의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여

---

에 관한 포럼'에서 카터 에커트 교수는 또 “특히 언론은 그 동안 군정에 저항적이었는가, 협조적이었는가. 내가 듣기로는 언론인들의 입장이 분열돼 있었다는데...”라고 질문해 한국 지식인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보였다. 金在洪, 박정희의 유산(서울: 푸른 숲, 1998), 207~8.

기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역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회적 연관성으로부터 초월한 입장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만하임이 지적한대로 존재구속적 지식인의 제약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 여부가 그 역할수행과 영향력을 규정지을 것이다.

지역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소속감을 넓은 국가공동체 보다도 작은 지역에 두는 것으로 본래 근대 산업화 이전 농경시대의 산물이다. 경작지가 생활의 원천이었던 조건아래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귀속감과 정서는 자연스러웠고 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노동을 담당하는 농민들로서는 지주와 봉건영주가 국가군주보다 더 중요한 충성심의 대상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봉건적 지역정서가 근대화 이후에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지역 감정과 지역갈등으로 심화돼 온 것이 문제다.<sup>13)</sup>

정치적으로는 특정 지역출신 정치인이 전국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담당하고 그 결과 동향인들에게 국가공직을 더 많이 할당함으로써 지역감정과 갈등이 촉발됐다. 특히 5.16군사쿠데타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에 따라 몰리는 비이성적 현상이 반복됐다. 마치 동향 출신 스포츠 선수를 무조건 응원하는 것과 같은 군중심리가 선거를 지배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지역주의에 함몰되는

---

13) 한국에서 지역감정과 갈등에 관한 연구와 토론은 그동안 정치 사회학자, 종교인, 시민단체들간에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직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으며 모든 지식인들의 고민스런 숙제다.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경제개발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국가재원을 분배하고 투자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시켰다. 특히 30여년간 개발독재를 강행한 군사권위주의 정권은 정부예산이나 은행여신 뿐아니라 외국차관의 분배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경제개발과 국가 부가 지역적으로 편재되는 불균형을 구조화시켜 놓았다.<sup>14)</sup>

그렇게 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 했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과 적대감을 표출했다. 이런 경우 지식인이 과연 얼마나 비이성적 지역주의를 탈피해서 바람직한 화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침해화된 비합리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입지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2) 정치적 지역주의

최근 지역주의가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4.13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분포였다. 이른바 정치적 지역주의의 지표에 해당한다. 이 총선의 특징 중 하

---

14) 다음의 글도 같은 입장이다.

이종오, “4.13총선 어떻게 볼 것인가: 영남, 상층에서 이식된 사회의식 그 반호남정서,” 다리, 2000년 여름호.

이종오 교수는 이 글에서 ‘호남문제’의 본질은 지방의 기질과 특질이 아니라 50년대의 한국전쟁과 6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의 사회적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는 지역주의가 더욱 조직화되고 세련되게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영남에서는 인물보다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분위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가 소속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나 정책노선을 선택한 결과도 아니었다. 영남지역 주민에게 불만스런 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치인 몇 명을 뽑는 것보다도 제1야당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총선 시민연대가 정한 낙선운동 대상자의 낙선율도 영남 지역에서 가장 미미했다. 특히 이 지역의 한나라당 후보 중 15명이 낙선운동 대상자였으나 이 중 한 명도 낙선되지 않고 전원 당선됐다. 이것도 영남지역 유권자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한나라당에 표 몰아주기를 했다는 증거 중 하나다. 수도권에서는 낙선운동 대상자 22명중 20명이 낙선한 것을 보아도 영남에서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이 조직화한 지역주의를 뚫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국당의 영남 출신 거물급 후보들이 대거 고배를 마신 것도 '현정권에 대한 조직적 견제' 의식 때문이었다. 민국당 후보들이 지역주의 조장 발언으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지탄을 샀지만 그 낙선 이유가 지역감정 혐오 때문이라기 보다는 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의 결과였다.

---

15)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재홍, "4·13 총선 民意와 16대국회 종합분석," 신동아, 2000년 5월호 별책부록.

과거 저급한 지역주의가 선거관세를 좌우했다면 2000년 총선은 '지역주의의 조직화'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다시 영남의 패권적 지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역주의 발언이 유세장에서 횡행한 것이 그 증거다. 과거 선거전마다 그런 저질스런 지역감정 조장발언으로 득표해 온 구정치인들이 또 다시 구태를 되풀이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제1야당에 대한 표 집결이었다.

호남에서는 지역주의가 온존한 채 제한적으로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민주당 공천자를 밀어낸 무소속 당선자가 4명이나 나온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이변이었다. 그러나 이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역주의 혁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체제 내에서의 공천심판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다.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장을 제끼고 나름대로 인물평가를 기준으로 표를 던진 일은 실로 사상 처음이었다.

충청권에서 정당별 당선자가 자민련 11명, 민주당 8명, 한나라당 4명이어서 지역구도를 타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은 지역주의 탈피보다는 구정치인 물갈이와 세대 교체 의미가 더 강했다. 자민련과 김종필 명예총재 보다도 새로운 충청지역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됐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충청권에서 김 명예총재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했음이 드러났다.



총선 결과 나타난 정당별 의석분포는 한나라당이 133석, 여당인 민주당이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이었다.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은 영남지역 의석 65석중 무소속 1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한 덕이다. 서울 경기의 수도권에서는 총97석 중 △민주당 56석 △한나라당 40석 △자민련 1석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충청권에서 8석, 강원 5석, 제주 2석을 얻어 영남권의 한나라당 싹쓸이를 제외하고는 전국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그런 위상도 2000년 6월 지방선거와 의원 13명을 뽑은 8월 재보선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 배경은 기본적인 지역주의 위에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패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됨으로써 부패정권 심판이라는 요인이 더 보태진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 **3) 이데올로기 고착증**

우리 사회의 화합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장애로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고착증을 빼놓을 수 없다. 자신이 이미 받아들인 세계관과 이념은 다른 사람과 아무리 설득력 있는 대화와 토의를 거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고착증이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심지어 그것을 선비정신이나 학자적 소신으로 치부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토론문화가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 고착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식인이란 양식과 소신 못지 않게 합리적 토론과 논리에 승복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관점을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인 사회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별로 나뉘거나 또는 학연별로 그룹화돼서 입장과 관점이 고정돼 버린 것 같은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해방 후 남한의 정치과정이 분열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주요 이유도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적 갈등 때문이었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좌우익 진영으로 분열돼 통합적 임시정부를 만들지 못했다.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는 온건하고 통합적인 중간파 정당들도 비중있는 세력을 형성했으나 다른 이념을 가진 정파들을 화합하게 하는 역할에서는 실패했다. 해방 후 정당들이 이념면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분산되는 형국이었으나 그것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 통합의 변수로 소화될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의 다양성이 아니라 고착된 이데올로기의 성격이었기 때문이다.<sup>16)</sup>

우리 사회 내 진보와 보수진영의 입장차이는 이제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어떤 형식이든 서로 수렴돼야 할 역사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이 오히려 지식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16) 해방정국에서 좌우익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통합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서를 참조할 것.  
金在洪,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서울: 나남, 1992)

그것은 정책이 지식인층의 갈등을 자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왕에 내재해 온 이념적 고착이 대북정책을 계기로 표면화하는 양상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식인 사회내부는 정치권의 여야 정파 못지 않게 견해차로 분열돼 있다. 이념적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바로 대북정책과 경제개혁 문제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정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온 김대중 정부는 지식인 사회에 이념적 갈등을 표면화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있는 셈이다.

#### 4. 전문가들의 견해

2002년 6월 서해에서 남북 해군간에 전투가 벌어진 직후 정부나 일반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고 선제공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식인층의 지혜로운 제언은 정부와 국민에게 함께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언론에 실린 지식인들의 견해는 사건이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는데 기여하기보다도 자신의 기존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측 사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사건 직후인 6월 30일자 신문에 게재됐다. 사건의 배경과 대책에 관해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태의 발단은 1999년 6월 연평해전 때처럼 꽃게잡이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외화사정이 어려워져 꽃게잡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해마다 이맘 때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은 꽃게잡이를 둘러싼 남북간 분쟁이 일곤 했다. 하지만 교전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북한 군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든다.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 군부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노리다 이번 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sup>17)</sup>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 1999년 6월 서해교전에서 패배한 경험을 가진 북한 해군으로선 그동안 보복의 기회만 엿보아 오던 차에 이번에 상부의 지시가 있자 정면 선제공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북특사 파견을 앞둔 미국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포함한 ‘조선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논리를 내세

---

17) 한겨레, 2002년 6월30일자(논평).

고유환 교수는 그러나 서해교전이 북한의 해군사령부 차원의 도발로 보기에 너무 과장이 큰 사건이며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견해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고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의도한 도발로는 보기 어렵다. 북한 군부 차원에서 99년 연평해전 패배에 대한 설욕을 준비해오다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동아일보, 2002년 6월30일자(논평).

위 기국의 기를 꺾으려는 고도의 협상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햇볕만이 아니라 바람도 보내는 선택적 포용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본다.<sup>18)</sup>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999년 연평해전에 이어 동일 해역에서 교전이 재발한 것은 남북한 경계선 중 어느 곳보다도 불안정한 이 해역의 특성에 기인한다. 유엔군이 정전 직후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지만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화근이 되고 있다.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 이상으로 꽃게잡이를 통한 외화벌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갖고 있다. 그들의 침범이 매년 꽃게잡이 철인 6월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sup>19)</sup>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해군사령부 차원의 도발로 보기에선 너무 과장이 큰 사건이다.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아리랑축전 등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북미대화를 앞두고 미국측에 대해서는 '북한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는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 최고위층이 전향적인 입장을 전달해 오지 않는 한 남북간의 냉각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sup>20)</sup>

---

18) 중앙일보, 2002년 6월30일자(시론).

19) 동아일보, 2002년 7월3일자(시론).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1.21사태 발생후 김일성은 우리 당국자들에게 군사모험주의에 의해 저질러졌고 그들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전도 북한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총을 누가 먼저 쏘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국가 핵심 지도부가 계획하고 준비했는가도 중요하다. 서해교전으로 표면화한 북방한계선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는 현재 양측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구역을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도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북방한계선은 향후 남북당국 간에 논의돼야 한다. 또 그 인근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남북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북특사 철회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했는지, 일방적으로 통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초기의 것으로 되돌아갔다면 문제다.<sup>21)</sup>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우발성이나 최고지도부의 묵인 하에 진행된 의도적인 도발이나 하는 교전 성격규정은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논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관계 경색이 우려되자 세간에는 2003년 위기설이 다시 나온다. 미국이 교전을 빌미로 북미관계를 경색시킨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결코 한미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북미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 북한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서

20) 동아일보, 2002년 6월30일자(논평).

21) 한국일보, 2002년 7월5일자(대담).

는 북한이 99년 연평해전 직후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제기했으나 유엔사가 이를 거부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미협상의 의제로 제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핵심 당사자는 바로 남북한이어야 하지 때문이다.<sup>22)</sup>

△백진현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설혹 북한측의 회신이 있었더라도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미대화의 재개가 정체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해 왔던 한국 정부는 무척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 이번 교전이 '우발적' 사태임을 설득한다거나 특사의 조기방북을 촉구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서해사태가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국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과 대응자세가 우방이나 우리 국민의 수궁을 얻어 낼 수 있을 만큼 객관성이나 책임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sup>23)</sup>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공격위협 때문에 우리 해군이 지속적인 공격을 자제했다면 다른 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예방하고 필요시 보복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군사적 작전과 전쟁을 수행할 정치적 군사적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

---

22) 위의 대담기사.

23) 중앙일보, 2002년 7월5일자(시론).

다.24)

△송복 연세대 교수= 햇볕정책은 현 정권의 레이블이나 다름없지만 국민은 명확히 모른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획기적 조우가 있었다고 해서 북한의 일방적 도발이나 일방적 파괴행위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햇볕정책은 정책 성향상으로는 민족우선이고 정책방법상으로는 현금지원으로 분석된다. 역사상 어느 민족이 민족우선을 내세워 그 각기 다른 정치단위를 통합할 수 있었는가. 오로지 국가우선만이 유일한 수단을 통합의 지름길이 돼 왔다. 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모두가 거꾸로 되어 있다. 지난 99년의 서해안 교란이나 지난달의 서해안 교전이 입증하듯 이젠 '북방한계선도 철폐하라' 하지 않는가.25)

△남시욱 성균관대 겸임교수= DJ의 햇볕정책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목표달성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김정일 정권이 우리측에 대해 기습적 무력 공격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벽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금까지 그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온 DJ 햇볕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독선적 자세, 그리고 추진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었다. 그 결과 상황에 따라 강온 양면전술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어 버렸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하면서도 막상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먹을 쌀의 제공은 보류하는 모순이 빚어졌다. 북한의 도발이 어떤

---

24) 중앙일보, 2002년 7월6일자(시론).

25) 조선일보, 2002년 7월11일자(시론).



과정을 거친 것이든 김정일의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sup>26)</sup>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반되고 대립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우선 공통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교전은 1999년 연평해전의 패전에 대한 설욕전으로 북한 군부가 계획했을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방한계선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셋째, 앞으로도 재발가능성이 크다. 넷째, 서해교전의 배경과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싸고 남한 내부에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견해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인 문제들이다. 전문가들도 진보와 보수적인 입장으로 나뉘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북한 군부가 설욕전을 위해 계획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지도부가 사전 허가하지 않고서는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고위지도부가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둘째, 꽃게잡이 철인 매년 6월이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셋째, 북방한계선도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제 남북당국간에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을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와 북방한계선은 군이 사수해야 할 우리의 국경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넷째, 대

---

26) 동아일보, 2002년 7월11일자(시론).

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쟁이다. 다섯째, 한미공조는 한국 주도의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남북화해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남북교류 보다도 한미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들이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이 진보와 보수 노선의 고착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 결 어 : 공동체 접착제로서의 지식인과 언론

지식인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공동체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를 간수하고 후계세대에 전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사조를 처방하는 주도계층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통상적이고 보수적인 역할이고 후자는 개혁적인 위상을 보여준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여부는 시대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위상도 이와 동일한 성격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적 과제와 쟁점에 대해 지식인층 내부가 먼저 의견수렴을 해야 사회공동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지식인이 지역과 이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한다면 화합이 아니라 분열을 더 조장하게 된다. 물론 지식인이 자신의 세계관과 철학에

따라 독립적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 환경과 이해관계,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편성과 객관성의 검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 만하임이 지적한 존재구속적인 한계를 벗어나 초월적 이상에 눈을 맞추고 사회내 다양한 이해충돌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고안해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남북화해, 정치개혁, 경제구조 조정, 교육제도 확립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시행되기에 앞서, 또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에 의해 평가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중간 완충역을 담당하는 지식인들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태도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지식층이 정책에 대해 그 본질적 내용을 근거로 지지와 반대를 논하기보다도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권 담당자들이 지역적으로 다를 경우 정책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서적인 거부감에 싸여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식층은 사회공동체의 가치준거를 만드는 역할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사표현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사회 내 쟁점과 정책사안을 놓고 평가할 때 그 기준과 기본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사안은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민족적 차원, 정치적 차원, 지방자치 차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이런 중요도의 차원에 따라 논의의 방법론과 태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치 무대의 국회의원들이나 여론주도층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다면 이는 바로 이슈의 차원을 구분할 줄 모르는 저급한 행동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남북화해 정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족적 차원의 과제를 두고 모든 계층이 마치 민생문제에 대해 한마디씩 던지는 식으로 혼전을 벌인다면 이는 민족공동체를 훼손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또 지식인들은 사회계층적으로 정부 엘리트에 근접해 있어 자칫 경쟁의식에서 무조건적 정책 비판에 나설 위험성도 갖는다. 사회계층 구조로 대중(mass)- 중간계층(intemmediate group)- 대항엘리트(counter elite)- 지배엘리트(ruling elite)를 그린다면 지식인은 중간계층과 대항엘리트에 해당한다. 이중에서도 지배엘리트, 즉 정책결정자에 근접해 있는 대항엘리트군에 속하는 고급 전문지식인일수록 정책비판에서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지식인으로서 비판역할이기 보다는 자기이익을 주장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이다.

지식인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말과 글을 수단으로 사회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국가공동체의 조직이 유지되게 하는 시멘트의 역할을 한다. 지식인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책결정이 도출되는 결과보다도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도 화합에 더 비중을 둔다.<sup>27)</sup>

---

27) 정치통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지식인층도 자체 내부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족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시키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중간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남남화합을 위한 일대 컨센서스를 형성시키는 시대적 사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컨센서스 개념은 영국 정치사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노동당 소속이지만 그가 제시한 제3의 길은 보수당의 마저릿 대처 전총리가 구사한 정책들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내용이 많다. 정당간 정권교체가 전시대와 구별되는 많은 전환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리의 관념과 크게 다른 것이다. 영국정치 전문가들은 이것을 ‘영국적 컨센서스’라고 부른다.<sup>28)</sup>

영국의 현대정치사에는 여야 정당간 정권교체가 구시대를 부정하는 전환보다도 연속적 계승발전을 보여 준 두 차례의 커다란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 번째는 2차대전 후 집권한 노동당이 이룩한 복지국가 모델

---

논문을 참조할 것.

金在洪,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과 정치커뮤니케이션,” 한국통일안보학회 제3회 학술회의 논문집(서울: 한국통일안보학회, 2000)

28) 영국적 컨센서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金在洪, “제3의 길과 한국정치,” 신문연구, 제69호(1998년 겨울호)

을 1951년 정권교체로 들어선 보수당 정부가 그대로 계승한 일이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게 가미된 그 복지제도의 틀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이후 대처리즘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 컨센서스가 공표된 것이 바로 블레어의 제3의 길에 의해서였다. 보수당의 대처 전 수상이 이루어 놓은 자유시장 체제와 노동조합 통제의 기반을 이어가며 미완의 복지정책을 다듬어 가겠다는 블레어 정부의 의지는 영국적 컨센서스 전통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었다.

한국 지식인들이 이 같은 영국적 컨센서스가 보여 주는 초정파적 정책판단과 냉철한 합리성을 터득한다면 남남화합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부 록

-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 統一教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統一教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統一教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도의 涵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教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教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教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教育은 개인적·과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教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教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教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각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教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教育實態의 調查·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教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教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重要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に 統一教育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 中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爲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等に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教育의 실시, 統一問題研究의 振興, 統一教育要員의 養成·지원, 教材의 開發·普及 其他의 方法으로 統一教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教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教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社會教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教育訓練課程에 統一教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教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振興을 爲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關連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研究所의 設置·운영 等を 勸獎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教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教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教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教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教育協議會)** ①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教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教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查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 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